

상용차 전장 통신 전문기업과 맞손

전북도·자동차융합기술원, 이씨스와 상호 협력

전북도는 17일 (재)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성수)과 (주)이씨스(대표 김용범, 인천 소재) 간에 상용차 전장 통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주)이씨스는 ETCS(하이패스), 블루투스 모듈, C-ITS1, 텔레매틱스2) 등 자동차 전장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전장 통신시스템 전문기업이다.

또한, 자율주행차기술에 필요한 양방향 RF(전파통신)기술의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WAVE3(V2X4)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실증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본 협약을 통해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이씨스는 상용차 전장 통신분야의 기술개발 및 전북지역 내 연구소 설립 및 지원, 개발기술의 실증 등 사업화 촉진, 보유장비 및 시설물의 활용 등 상용차 전장 및 통신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성수)은 "국내 대표적인 전장 및 통신시스템 전문기업인 (주)이씨스와 상호협력력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상용차 등에 탑재할 전장 통신부품의 공동연구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환영 소감을 전했다.

김용범 (주)이씨스 회장은 "이번 상호협력 협약을 시작으로 전북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당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과 신기술을 바탕으로 전북의 상용차관련 전장 통신 분야의 차별화된 신제품 개발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고 밝히며, "자동차융합기술원과의 협력을 통해 전북도와 군산시의 전장부품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반갑습니다"… 김경규 신임 농진청장 취임식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제28대 농촌진흥청장 취임식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경규 신임 청장이 취임사 후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국회,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

국회가 '잡지돈', '감감' 논란 끝에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하기로 한 국회의원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4일 특활비와 예비금, 특정업무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등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인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이' 하승수 공동대표에게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하 대표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특활비 등 4개 경비의 내역을 정보공개하라며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하고, 1심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당초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으나,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를 취하한 바 있다.

공개된 정보는 해당 기간 특활비와 예비금의 지출 결의서, 의장단과 정보위원회의 해외출장경비 집행관련 서류,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일반회계 4개 세부사업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이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

靑 “前특감반원, 허위주장 도저히 용납 못해”

청와대는 17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씨가 본인이 작성했다는 '정보보고서' 목록을 조선일보에 추가로 제출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언론도 더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조선일보에 '첩보 보고서' 목록을 추가로 제출했다. 목록

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개헌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민간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 업무와 관련 없는 보고서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비위 혐의로 현재 검찰이 진행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 비위행위를 덮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우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엔 새로운 비위행위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며 "우윤근 첩보" 보고를 계기로 원래 복귀하게 됐다는 김씨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해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 행위가 명백하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수사 대상자와 다수 통화 내용이 있는 듯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해야 할 상황"이라며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 인사 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선거제 개혁, ‘국민 동의’가 더 중요”

민주당, 여야 합의에 호너영
“의원 내각제로 권력구조 개편
국회 의석수 늘리기 등에
국민은 ‘부정적’ 여론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여야 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여전히 의석수를 늘리거나 의원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기국회 막판 야3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편을 연계함으로써 파행됐던 국회가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정상화됐다”며 “특히 선거제 개편의 기본 방향에도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의원정수, 지역구 선출방식, 석패율제 등의 도입 여부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선거제 개편을 위한 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정개특위가 조속히 회의 일정을 확정해 논의를 본격화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나갈 수 있는 최적의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개특위는 물론이고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모든 논의 및 협의 과정은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내년 신규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전북도, 행안부 지역주도형 사업 공모 133개 사업 선정

전북도는 일 경험 제공 및 기업고용 증대를 위한 신규 청년일자리 사업을 대거 추진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 전국 최대 규모인 133개 사업(전국 1위), 국비 11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청년유입을 지원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2021년도까지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사업으로 지자체가 각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을 맞춤형으로 발굴 기획, 행안부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심사를 거쳐 최종 133건 사업이 선정되어 2019년부터 도와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바 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1억8000만원),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27억원), 소상공인 100년 점포 청년 도제 지원사업(9000만원), 바이전주우수업체 지원(6억3000만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2억7900만원), 등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정착지원형'으로 37건 71억 원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도내 거주 만 18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군과 함께 2019년 1~2월 홈페이지 공지 및 SNS, 홍보매체 등 활용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3월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정부에서도 청년일 자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지원정책에 관심을 갖고 큰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지역 현장에 맞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일 경험과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지역에 정착하여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